

김정일의 위기 대응과 생존 전략

고유환(동국대 교수, 북한학)

1. 머리말

북한에 있어서 1990년대는 ‘엄혹한 시련의 연대’였다. 북한 당국은 “최근년간 조선의 형편은 50년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되었던 전후 시기보다 더 어려웠다”고 슬회하고 있다.¹⁾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자본주의 복귀와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혹심한 자연 재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그리고 핵개발 의혹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불거진 미·일 등 외부 세계와의 갈등 등으로 북한 주민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구조적인 체제 위기가 전면적으로 표

1) “90년대의 시련을 이겨낸 조선”, 『조선중앙통신』, 1999년 12월 24일.

출됨으로써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면서 ‘조기 붕괴설’이 나오는 등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기 속에서도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완료하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기보다는 자력갱생의 ‘강성대국’ 건설을 꿈꾸고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의 ‘령도자’ 자리를 차지한 김정일은 자신의 지도 체제를 공고히함과 아울러 대내외적인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고수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김일성 없는 김정일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핵·미사일 문제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부자승계에 따른 정통성의 부족을 효율성으로 만회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경제 발전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김정일은 북한 체제 위기의 근본 문제인 경제난을 극복해야 ‘효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범지구적인 확대에 따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의 불가피성 등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야 후계 체제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이 당면해 있는 체제 위기와 이에 대한 김정일의 대응 및 생존 전략을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 전략 또는 위기 대응 전략을 ①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제시를 통한 체제 결속, ② 핵·미사일 개발과 전쟁 위협을 통한 경제 지원 확보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 모색, ③ 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 정책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생존 전략은 시기별로 강조점을 달리 할 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무렵인 198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이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중심적 서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사회주의 체제 위기와 북한의 대응

1)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위기

반자본주의 운동의 기점이었던 ‘1968년 혁명’을 계기로 1970년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상승기를 맞았으나, 친자본주의 운동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89년 혁명’²⁾을 기점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폐기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복잡한 경제와 정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됨으로써 세계적인 쇠퇴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잔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4개국뿐이다. 북한을 비롯한 여타 잔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그들의 경제 체제를 조정하여야 하며, 정당성과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낡은 지식들을 새로운 급박한 사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데는 유용한 교의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경제 지향적인 탈냉전 시대에 있어 정치와 경제문제를 관리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복잡한 경제, 보다 분화된 사회, 다원화된 정치 체제, 국제 무역과 경쟁의 냉엄함, 그리고 자유와 민주뿐만 아니라 소비주의를 포함하는 ‘세계 정치 문화(World political culture, Lucian Pye의 용어)’에 대한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유용성이 훨씬 적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 및 동유럽의 구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은 ① 이데올로기의 위기, ② 체도의 위기, ③ 사회의 위기, ④ 리더십의 위기, ⑤ 경제의 위기, ⑥ 사기의 위기, ⑦ 국제적 위기 등을 맞게 되었다.³⁾ 위아르다(H. J. Wiarda)의 견해를 중심으로 각 위기들을 설명

2) 세계체제론자들은 1968년을 ‘반자본주의(anticapitalism)’적 대변혁의 기점으로, 그리고 1989년을 ‘친자본주의(procapitalism)’적 대변혁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Giovanni Arrighi,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1989, The Continuation of 1968”, *Review*, Vol. XV, No. 2(1992), pp. 221~242.

3) Howard J.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pared for International Workshop “The Durability and Direction of the Four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 China, Vietnam, Cuba and North Korea”(한국국제정치학회·민족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1994. 5. 27~28), pp. 6~12.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위기의 본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현대적인 복합적 상호 의존성과 기술력에 기초한 경제 질서에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의 위기는 당의 권위주의와 권력 독점 및 부패, 국가 행정 기관의 무책임과 무능 및 부패, 그리고 다양한 대중 조직(근로 단체)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군과 경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성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관료화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가끔 억압자로 보이는 등 제도적 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의 위기는 원로 혁명 지도부의 고령화와 영향력 감소 및 세대차와 세대간의 갈등, 알코올 중독, 결근 태업, 행정과 산업 현장에서의 사보타주 등의 사회 병리, 사회 전반의 비능률에 따른 사회 보장 서비스(보건, 교육, 주택 등)의 쇠퇴, 반대와 저항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이 정권에 위해(危害)를 가하고 결국은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리더십의 위기는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노쇠해지면서 나이 든 지도자로부터 새로운 지도부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벌간의 권력 투쟁, 군부의 정치 개입, 사적인 정치 야심의 표출 등으로 정권이 분열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의 위기는 대부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들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를 관리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다. 혁명 초기의 비교적 단순하고 농업에 기초를 둔 것으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공업과

기술에 기초한 상호 의존적인 경제로 이행되면서 경제 관리의 문제점은 심화되었다. 보다 개방된 시장 경제와의 경쟁에서 무력성을 보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은 물자 부족, 비능률, 궁핍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손상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몇몇 정권(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등)은 경제적 자유화를 채택 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타 정권(북한, 쿠바 등)은 이러한 정책의 선택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섯째, 사기의 위기는 반복된 희생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민들의 사기는 거의 소진점(vanishing point)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은 약속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 국민에게 현재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러한 반복된 요구 다음의 상황이 더 악화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해답을 주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국제적인 위기는 사회 진영의 해체에 따른 진정한 ‘동맹’의 부재와 확고한 상호 방위 조약의 부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세계의 미래의 물결로 명백해졌다는 점, 그리고 문화·인간 행태·기대 등의 지구촌화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멸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인식과 잔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들이 이러한 강력한 세계적인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직면했던 이러한 주요 위기들은 급기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설명 도식은 오늘날 잔존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준거(framework) 혹은 모델을 제공한다.

2) 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혁명은 거역할 수 없는, 아마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궁극적 운명은 자본주의로의 복귀로 귀결됐다. 따라서 중국, 북한 등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하고,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반응하고 대응해야만 한다는 판단 아래, 세계 공산주의의 붕괴에 의한 질곡의 더미와 잔존 공산주의의 진퇴유곡의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도부는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혁명을 따라가야 할 길 혹은 모방해야 할 모델로 보지 않고, 피해야 할 길 혹은 거부되어야 할 모델로 생각하고 이들 나라들의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부정적 교훈(negative lessons)’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교훈은 명백하고 단호하지만, 앞으로 수행해야 할 교훈은 애매하고 양면 가치적이며 위험한 것들이다.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직면해 왔던 위기의 본질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변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북한 및 잔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이데올로기적인 면 : 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중심부 중주 국가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포기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었다. 이념적 분열은 불안과 불안정을 야기시켰으며, 사적 변증법에 의

4) Vernon V. Aspaturian,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USSR and Eastern Europe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s in China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1994), pp. 275~281를 참조하여 북한에 적용함.

해 존재의 불가피성이 정당화되었던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및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정당성과 정체성이 역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잔존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부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정당성의 새로운 근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화, 즉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테제를 통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⁵⁾ 라는 테제하에서 소련 및 동구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과 반동·기회주의자의 궤변에 의한 책동의 결과 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사회주의는 재생되고 중국에는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와 붕괴된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념적 동요를 막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정치적인 면 : 소련과 동구의 경우 위로부터의 정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발함으로써 쉽게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 지도자들과 당 기관원, 그리고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는 일소되었다. 루마니아의 경우 유혈 폭력이 자행되었다. 무정부 상태와 유사한 정치적 마비, 무질서, 혼돈은 중앙정부의 주변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한 권력 구조와 정부 기관은 해체되어 허무하게 사라졌다. 법적·헌법적 기능 수행은 상실되고, 감정적·임시

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변통적인 대치물(과도 통치 기구)들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수습을 시도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 포기를 사회주의의 포기로 간주하고,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과정에서 쉽게 붕괴된 것은 당의 영도성, 즉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 당·정 분리, 다당제 수용 등 위로부터의 정치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정치와 사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와 사상 교육 강화 및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면 : 당과 국가의 지도를 받는 통제경제는 지시를 내리는 정치 중심의 붕괴로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침체되었다. 현실 경제가 악화됨으로써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불법과 반불법 형태의 사기업과 시장조작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강패와 마피아들의 경제 개입, 폭력과 부패 등이 과도 경제(transitional economy)에 만연하게 되었다. 실업, 낮은 생활 수준, 높은 인플레이션, 화폐와 통화관리의 실패, 식량을 비롯한 재화와 용역의 부족, 낮은 생산성 등이 국민 총생산액을 감소시켰으며, 분배·커뮤니케이션·수송 체계 등이 붕괴·마비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전면적인 시장 경제의 수용보다는 중국식 경제 개혁 모델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부분적으로 원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으로는 당의 영도적 역할(권력 독점)을 보장한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자유 경제 무역 지대(나진·선봉 등의 경제 특구) 등의 제한된 지역에 시장 경제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자본주의

로부터 수혈을 함으로써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 : 소련 및 동구의 경우 인위적인 전체주의 사회 질서가 해체됨으로써 사회 구조가 이완되었다. 소유 관계, 계약 의무, 생산 관계와 사회 관계 역시 악화되었다. 따라서 보건, 주택, 교육, 예술, 오락 등을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와 설비 투자도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 총체적으로 사회는 무질서와 사회 병리, 그리고 구사회의 위계와 특권이 없어짐으로써 긴 전환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혁명을 겪고 있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될 새로운 사회 계약 혹은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기존의 사회 보장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정일의 ‘인덕 정치’와 ‘광폭 정치’를 통한 인민에 대한 사랑과 각종 시혜를 선전하면서 사회 통합에 힘쓰고 있다.

다섯째, 국가 구조적 측면 : 소연방의 해체와 유고 내전, 체코슬로바키아 분열, 동독의 소멸 등은 중국, 북한 등의 잔존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들이다. 많은 인종적·종교적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혹은 오랜 지역주의와 전통을 가진 국가들인 경우 공산주의의 성급한 폐기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소수 민족이 전 국토의 약 60%,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다수의 민족과 종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를 포기할 경우 현존하는 통합되고 중앙 집권화된 중국이라는 국가는 민족과 종교를 구성 단위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동독의 사멸이 북한 지도부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회피되어야 할 악몽이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동독이라는 국가와 정부는 사라지게 되었다. 최고 지도자들의 체포 및 재판 회부와 함께 지배 엘리트들은 해체되었다. 사회주의 질서는 해체되고 사

회적 엘리트들은 권력을 박탈당했다.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는 동서독관계의 사실상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포기는 거의 확실히 국가의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포기와 대담한 체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먹고 먹히는’ 독일식 흡수 통일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동방의 사회주의 보루’임을 자처하며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대외 관계의 측면 : 세계 공산주의 운동과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은 이미 모든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과 상업 패턴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신용에 기초한 우호적인 태도(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에서의 우호 가격)와 재정 지원 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전의 연합, 적과 우, 동맹, 그리고 지역적인 다자간 조직은 폐기되고 새로운 조직이 모색되고 있다. 동유럽의 경우 두 개의 세계적인 국제 체제인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지역 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었으며, 동유럽 국가들과 몇몇 구소련에 속했던 공화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여타 서유럽 지역의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의 포기와의 리·한·중 수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카드를 활용하여 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을 전후하여 그들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정상 회담을 통해서 ‘친선 협조’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3.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 전략

1)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제시와 체제 결속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정권 당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이념적 위기, 즉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시작된 이후 김정일이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논문·담화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 과학성, 그리고 혁명 선배의 존대 등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 및 체제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북한 당국이 이념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을 기점으로 소련 및 동구권에서의 개혁이 급기야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붕괴된 사회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제시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체제 고수에 전력을 다하였다.

1974년 2월 당내에서 후계자로 지명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김정일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물결이 북한에 밀어닥치는 것을 막고자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 민족 제일주의론’ 등을 제시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조선 민족의 위대성을 선전하면서 체제 결속과 사

회 통합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무렵인 1989년 12월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연설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우리식의 사회주의론’을 펴기 시작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식의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겠다는 드팀없는 의지로 맞서고 있습니다”⁶⁾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우리 인민이 우리식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일대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여 온 력사는 수령님의 혁명 활동 력사이며 우리 당의 투쟁 력사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여야 조선 혁명을 우리식대로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⁷⁾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수령(김일성)과 당의 오류가 없는 투쟁의 결과에서 찾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의 재해석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소련과 중국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주의 이념과 당의 역사, 그리고 전임 지도자의 과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당시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계 체제도 부자 승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평가는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의 역사 또한 대부분 부자 체제의 역사이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개혁이 어려운 태생적 한계(胎生的 限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58쪽.
7) 위의 책, 260~261쪽.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에게 한 담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서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북한식 사회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로 정식화하였다. 김정일은 이 담화를 통해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인민 대중의 세기적 념원”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는 것만큼 전진 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으나 인류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 발전의 법칙”⁸⁾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정식화했다.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라고 역설하면서, 생산력 발전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였던 소련 및 동구권 ‘물질 중심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은 구소련에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공산당의 권력 독점의 포기)에 따른 공산당 지배의 종식을 목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을 사회주의의 포기로 간주했다. 김정일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고수와 관련하여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

8) 위의 책, 336쪽.

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년 10월 10일 당창건 47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1993년 3월 1일에 발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등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와 관련된 담화와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당연시되어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던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1992년 개정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담화에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사회주의화와 소연방의 해체에 직면하여 “사회주의 위업은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력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력사 발전의 기본 흐름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⁹⁾

그리고 김정일은 이들 국가에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①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동적 궤변에 의한 책동의 결과, ②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지 못한 결과, ③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 ④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등에서 찾으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방식이기 때문

9) 위의 책, 426~427쪽.

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 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김정일 명의의 담화·논문들은 대부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 및 사회주의권 국가가 추진했던 공산당의 지도적(영도적) 역할 포기과 당·정 분리, 그리고 다당제의 수용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혹은 사회주의의 포기로 간주하고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기존 체제의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 6. 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 10. 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1995. 12. 25) 등 4편의 논문·담화 모두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와 관련된 것이다.

2) 핵·미사일 개발과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 모색

북한은 전통적으로 그들 외교 정책의 목표를 북한 자체 보존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력 신장에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 통일에 그 최종 목표를 두어왔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특징지어지는 탈냉전 시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환경하에서 어떻게 자체 정권의 존속을 확고히 할 수 있을가가 그들의 최대의 정

10) 위의 책, 426~461쪽.

책 목표가 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의 북한 외교의 핵심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984년 미국과 남북한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의하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한·미 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88년 말부터 북경에서 참사관급 비밀 접촉을 시발로 북·미 간의 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부터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기도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반응책의 강구이고, 둘째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남북한 간의 국력의 격차로 인한 열등감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정치적 고려 사항 이외에도 체제 내적인 이유와 사연이 있었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 유지, 안보 대비, 방위력 증가 등의 정치적·정책적 기반에 입각해서 핵개발 또는 핵개발 보류와 같은 중요한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체제의 방어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냉전 이후 세계 정치 상황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북한 지도부는 핵카드 이용이라는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전술 전략을 쓰게 된 것이다.¹¹⁾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기대감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과 가설을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체제 존속을 위한 전략으로서 탈냉전 시대의 환경하에서 핵무기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대외 관계와 특히 미국과의 협상용으로서의 가치(negotiation leverage and bargaining chip) 때문에 핵무기

11) 김영환, "북한핵 개발의 정치적 측면", 『김일성 사후의 북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발표문, 1994. 11. 4~5), 5쪽.

를 개발한다고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군사 방위와 억지(deterrence)라는 효율성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¹²⁾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북한은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서구 선진 국가들 및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만 했다. 선진 국가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매우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¹³⁾나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 기구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들 기구와의 외교 협상을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그 동안 강력히 반대해 오던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 9. 17)을 결정하게 된 것은 변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UN을 통한 북한 체제의 보전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과는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발효시켰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피했다. 그 동안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이 탈냉전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그들의 체제 유지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기대와 희망대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배해 왔던 김일성의 사망 등의 국내외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한 끝에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를 통해서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12) 위의 글, 7쪽.

13) 북한은 1974년에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였지만,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것은 1992년 1월 30일이다.

리지음으로써 체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1994년 여름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등 서방과의 대타협을 모색했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권위에 의존해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서방과의 대타협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일은 서방과의 대타협 전략을 유보하고 남한 당국을 배제하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추진하면서 3년간의 ‘유혼 통치’를 실시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존의 중심 고리’로 삼아 체제 보장과 경제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네바 북·미 합의문 채택 이후 북·미 관계는 가끔 긴장 관계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네바 합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서 ‘핵동결’ 약속, 1999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 시설 ‘방문’ 합의, 1999년 9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그리고 2000년 10월 북·미 양국의 고위급 특사 교환 및 북미 공동 코뮌니케 발표 등 북·미 간에는 다소 굴곡이 있기는 해도 현안 문제의 협상과 타협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확대 전략’ 및 북한의 ‘생존 전략’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해 왔고, 향후에도 ‘페리 구상’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클린턴의 임기 중에 고위급 회담과 정상 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그렇게 해두어야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이

특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6년여 동안 북한은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핵동결을 약속하고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가려 했지만 북한이 바라는 만큼 관계 개선 속도가 나지 않았다.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구보 행군,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등으로 난관을 헤쳐나오려 했지만 내부 자원의 고갈로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역부족을 절감하게 됐다.

따라서 북한은 2000년 6월 통미봉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남북 정상 회담에 응함으로써 서방과의 대타협 노선을 다시 본격화하게 됐다. 북한이 서울을 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대북한 영향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일본의 대북 접근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북한은 남북 정상 회담을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과 현안 문제인 적대 관계(교전 관계) 해소 및 평화 협정 체결 문제, 테러 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의 출범으로 북한의 북미 관계 개선 전략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3)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생존 모색

북한은 사회주의 대국의 내정 간섭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편입 압력을 거부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정치와 사상 우선의 혁명적 중상주의 발전 노선 또는 국가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추진함

으로써 대외의존과 종속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 노동 분업 구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술 혁신과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차단되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게 됐다.

북한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중국의 경제 개방 경험을 원용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대외 개방의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하지 않고는 심각한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경제 특구 설치를 통한 서방 자본 유치, 그리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1989년 12월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연설을 통해 대외 개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지적함¹⁴⁾과 동시에 선진적인 것은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력갱생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선진적인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¹⁵⁾라고 주장하여 자력갱생에 대한 의미를 다소 수정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¹⁶⁾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제한적인 대외 개방에 적

14) 김정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민족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입병’을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경고하였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271쪽.

15)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272쪽.

16)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논문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 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혀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50쪽.

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개방 준비를 하여왔다.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28호로 나진·선봉에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서둘렀다.

1992년 2월 북한은 ‘대외 무역 사업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을 정무원 명의로 채택하여, 이른바 ‘신무역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제16조, 제37조)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 외국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의 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새롭게 명시하였다.¹⁷⁾

비록 핵개발 의혹 문제로 서방과의 경협이 한때 주춤거렸지만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는 대외 개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한 총화를 통해 “대내외 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화된 시기에 심각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추진됐다”고 전제하고 “이 기간 중 구소련과 동유럽 각국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하고 세계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전례 없이 격화”되고 “세계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잇따라 생긴 중대한 국제적 변화와 복잡한 사태가 북한의 혁명과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쳐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했다고 밝힘으로써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경제 건설의 실패를 시인했다.¹⁸⁾

17) 제1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37조 :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따라서 북한은 변화된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2~3년간(후에 3년간으로 수정)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조정 기간으로 삼아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로 나아간다는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¹⁹⁾

북한이 1995년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이라는 문건에서 밝힌 북한 대외 경제 정책의 기초는 첫째,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둘째,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적 교류와 협조 관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북한은 이 문건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 협조의 발전추세에도 맞다고 간주한다”라고 하여 북한이 앞으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외 경제 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²⁰⁾

북한은 1990년대 중반 한때 북·미 관계 개선에 발맞추어 자본주의

18) 『동아일보』, 1993년 12월 10일.

19) 북한이 동 전원회의 발표문에서 “근년 중에 모든 사람이 흰 쌀밥과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산다는 인민의 숙원을 실현,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식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다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의 인민의 숙원을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흰 쌀밥 등의 문제를 20세기를 마감하는 시기까지 인민의 숙원으로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완전한 사회주의 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기 위한 교육정책(苦肉之策)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은 인민생활을 한 단계 높인 다음 제7차 당대회를 연다고 하였으나 경제 건설의 실패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5년에 한 번씩 열기로 되어 있는 당대회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택국제(홍콩)유한공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1995), 6~9쪽.

국가들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1996년 4월 22일 조지워싱턴대 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침투와 국제 시장의 논리 및 규범의 광범위한 도입이 앞으로 북한이 취해나갈 대외 경제 정책의 기조”라고 밝혔다. 김정우는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마당에 체제 존립을 위한 대외 경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 조성을 위해 각종 법률 제정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기존의 주체 경제 노선에서 획기적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¹⁾

김정우는 “국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 경제’가 대외 협력을 무시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향 전환을 할 경우 북한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우의 이 같은 주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거부해 왔던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야심적인 접근 계획”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권으로부터의 탈피”란 점에서 주체 노선의 근본적 수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북한 지도부의 대외 경제 정책 전환에 관한 의사표시는 북한이 당면해 있는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이 표방했던 자력갱생적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력갱생적 상향 이동 발전 전략(정치·사상 우선의 혁명적 중상주의 또는 국가

21) 『중앙일보』, 1996년 2월 23일.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고, 유치를 통한 발전 촉진 전략 (대의 개방을 통한 수출 주도형 중상주의 발전 전략)으로의 발전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²²⁾

그러나 개방파로 알려진 김정우, 김문성 등이 숙청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야심적인 접근 계획”도 유보되었고, 김정일의 공식 승계 이후 자력갱생식 강성대국 건설 노선이 통치 구호로 등장했다.

4.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강성대국 건설론

1)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차이점²³⁾

1994년 7월 8일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통치해 왔던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후계 체제인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이자 그 일부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대와는 아주 다른 국내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

22) 월러스틴은 상향 이동의 세 가지 발전 전략으로 ① 기회 포착(seizing the chance) 전략: 세계경제 수축기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② 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promotion by invitation) 전략: 경제 특구 설치 및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으로 외국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 등을 국내 생산 활동에 끌어들이는 발전 전략, ③ 자력갱생(self-reliance) 전략: 국내적인 자금 자족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66~94.

23) 고유환, “김정일체제의 위기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로”, 『안보연구』, 제24호(1994), 80~81쪽.

첫째, 국제 환경의 결정적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가 김정일 시대의 국제 환경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1989년 이래 동구권 국가의 체제 변혁과 소연방의 붕괴는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형성한 1950년대, 즉 사회주의 그 자체가 활력을 갖고 있던 시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국제 환경이다. 그 때문에 김정일은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시대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현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이다. 한국의 북방 외교의 성공에 따른 한·소(러), 한·중 수교는 김정일에게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은 과거 중·소로부터 경쟁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김정일은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형편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이 어려워지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지와 우호 가격 폐지 및 경화 결제 요구 등의 경제 지원 감소, 그리고 북한 내부의 경제 활력의 감퇴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식량난 등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볼 때 남한과의 결정적인 경제 격차도 김일성 시대와 다르고 더욱 심각한 전제 조건의 차이가 된다. 남한의 경제 발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마저 내포하는 것이다.

셋째, 카리스마의 저하를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이미 20여 년 이상 준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충성심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변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김정일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

도 북한 주민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김일성도 초기 단계에선 소련군의 배경을 등에 업고 스스로의 권력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 점에서는 김일성을 배경으로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김정일도 별 차이는 없다. 오히려 김일성이 경험한 당내 권력 투쟁을 생각해 볼 때 김정일의 권력 기반 확립은 김일성보다는 순조로울지도 모른다.²⁴⁾

넷째, 정통성 확보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항일 투쟁과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반봉건·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서 그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의 정책 목표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주체와 자주 노선 확립, 즉 정치 논리 우선의 국내외 정책 추진을 통한 정통성 확보였다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야 하는 김정일 시대는 국경 없는 경제 전쟁 시대이므로 김정일은 실리중시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경제 논리 우선의 대내외 정책을 통한 경제 발전 성과를 그의 정통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많은 숙제를 물려받은 김정일은 정치적으로 권력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와 핵·미사일 개발 및 한반도 통일 등도 김정일 정권의 당면 문제이다.

24) 平岩俊司, “金正日 체제하의 北韓政治: ‘人德政治’와 體制守護”(아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南北關係의 새로운 認識’의 발표 논문, 1994), 5~7쪽.

2) 강성대국 건설론과 선군정치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지도 이념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죽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등식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8년 9월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의 유혼을 법제화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의 국정 지표로 ‘강성대국 건설’론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를 앞둔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김정일 시대의 통치 구호로 ‘강성대국 건설’론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이 밝힌 강성대국 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건설, 수령 중심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 강국 건설, 선군(先軍) 정치, 일심 단결, 자력갱생 등 기존의 ‘주체 노선’을 유지·고수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방식은 ‘선(先) 사상·군사건설 후(後) 경제 건설’ 방식이다. 김정일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 방식’은 사상(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정신)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를 튼튼히 세우고(선군정치, 선군 혁명 노선, 총대 철학, 혁명적 군인 정신, 군사중시, 국방력 강화), 그 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건설(자력갱생, 자립적 민족 경제)을 추진하는 것이다.²⁵⁾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세운 목표는 명백하며 갈 길은 불변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이 견지한 신조와 철칙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

25)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 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방식이다.”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지 말라!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식대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라든가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어떤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으실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은 상상도 못한다”라는 등의 주장에서,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주석제 폐지, 인공 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김정일의 통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당과 국가 기관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도 김정일의 사상·군대 사업 우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²⁶⁾ 그리고 “나라의 강대성은 사상의 힘, 정치의 위력에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²⁷⁾라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당이 내세운 ‘위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위업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 애족의 위업이다”²⁸⁾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에서 북한은 군사 국가의 제도화 차원에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가 기구 체계의 개편을 마무리했다.²⁹⁾ 그리고 북한은 1999년

26) 『로동신문』, 1998년 9월 8일.

27)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8년 9월 9일.

28) 위의 글.

29)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

6월 16일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했다. 공동 논설에서 밝힌 김정일의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 방식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 수단이라면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 수단”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군사 중시 방향으로 나가야 사회주의 정권의 정치 군사적 토대가 철옹성같이 다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군대가 강해야 경제 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³⁰⁾

요컨대,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의 통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군사 국가를 제도화했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선 ‘총대’로 극복해 보겠다는 김정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개혁·개방 등을 통해서 체제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선군 혁명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

휘 통솔하며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 최고 직책”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30)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1999년 6월 16일.

3)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의 재천명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일의 공식 승계 완료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 발전 노선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개정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확대 해석하면서 개혁·개방 등 경제 관리 방식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였다.³¹⁾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기존 노선의 고수를 내외에 천명하고 중공업 우선주의 등 1950년대식 발전 전략을 표방하는 등 ‘북한식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 50주년 기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에서 사상과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을 건설하여 존엄을 떨치고 있는데 경제 건설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공 지구 위성을 100%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우리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불패의 위력의 과시로 된다”³²⁾고 하면서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31)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 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사회 단체, 협동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제36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 경제 지대에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제37조)을 추가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법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북한은 사상·이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일부 묵인하고, 거주 여행의 자유를 허용(헌법 제75조)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세계금융기구로부터의 외자 도입과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2) 『로동신문』 사설, 1998년 9월 9일.

북한 당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 사상, 지도 리념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조국 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북한 정권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 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귀중한 교과서이다”라고 주장했다.³³⁾

이와 같이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철두철미 우리식, 주체의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헌법 개정과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제목으로 1998년 9월 17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이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논설에서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중공업 우선주의의 경제 발전 노선을 밝히면서 외세 의존 경제 및 세계경제의 일체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9·17 공동 논설’에서 밝힌 북한의 발전 전략은 급진주의 종속론자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북한은 “제국주의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의 본질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서방화, 미국화하여 세계경제를 통제로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 타령은 사탕 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자기식의 처방에 따라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33) 위의 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9·17 공동 논설’에서 주목하여야 할 대목은 자립적인 중공업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 사망 직전까지 몇 년간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 추진하고자 했던 ‘무역 제 일주의’ 노선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91년 11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³⁴⁾라는 연설을 통해서 “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 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려면 무역 사업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무역부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무역 회사들을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 넘겨주어 위원회, 부들이 자체로 무역을 하여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9·17 공동 논설’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우리는 특수한 경제 구조를 허무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인민 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대외 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 방도로 될 수 없다. 물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도 발전시키고 대외 무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주의를 표방한 것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의 보고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테제로 제시한 때부터이다. 당시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후 복구 건설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심 고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정일도 현재의 상황을 전후 복구 시대와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규

3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30~237쪽.

정하고 위험 부담이 높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중공업 우선 정책을 통한 경제적 난관의 극복을 꾀하고 있다.

공식 승계 이후 김정일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식 ‘강성대국 건설’을 고집하고 있지만, 내심은 중국식(경제 특구)+쿠바식(관광 개방)+박정희식(개발 독재)의 장점을 절충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김정일 정권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대외 관계, 남북 관계 등이 상호 연계되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체제와 정권 유지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당분간 1950년대식 발전 전략으로 회귀하여 난관을 극복하려고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밝힌 문건을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 논설을 통해 발표했다.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1999년 6월 1일)란 논설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사회주의가 빛을 잃게 되며 나아가서 인류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 20세기가 남긴 교훈이다”라고 밝히면서 자본주의 해충(황색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개성’과 ‘다원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분야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과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 ‘개방’에 추호도 환상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 지상주의와 날라리풍, ‘창작의 자유’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계정신으로 역세계 싸워 나가자”(2000년 4월 22일)에서 북한은 강계정신을 “사회주의 수호 정신이며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이 타

오르게 한 투쟁 정신”이라고 하면서 “강계정신의 본질은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당과 수령,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는 백철불굴의 투쟁 정신”이라고 밝혔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2000년 7월 4일)에서 북한은 “과학 중시 사상은 조선로동당이 현 시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강 조국 건설의 전략적 로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곧 과학 기술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공동 논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일은 당분간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내각 개편과 국가 기관의 기능 강화, 그리고 경제 관리 방식의 부분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계산 아래 ‘북한식 정경 분리 정책’을 통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사상·군사 중시의 정치 우선주의를 표방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합영 합작과 투자 유치 및 자유 경제 무역 지대 활성화의 의지가 있음을 공표하고, “자물쇠가 문 안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채워져 있다”³⁵⁾고 하면서 북한식 개방 전략인 ‘모기장식 개방’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심각한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북한식(우리식)’ 개방, 즉 급격한 체제 개혁 없이 ‘수혈’ 개념의 극히 제한적인 개방만을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의 지도부도 내부 자원의 고갈로 자력갱생식 발전 전략으로는 체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대외 무역과 외국 자

35) 『평양방송』, 1998년 10월 3일.

본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이에 필요한 법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 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사회 단체, 협동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제36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 경제 지대에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제37조)을 추가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북한은 사상·이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일부 묵인하고, 거주 여행의 자유를 허용(헌법 제75조) 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금융 기구(IMF, IBRD 등)로부터의 외자 도입과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자를 도입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나타난 체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념적 동요를 막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체제 보장과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탈냉전과 함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을 통한 관계 개선을 생존의 ‘중심 고리’라고 판단하고, 대미 접근전략을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유지를 담보받기 위한 생존 전략과 ‘벼랑끝 외교’를 추진했다.

북한은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문 채택 이후 군사적으로는 정전 체제의 무력화를 통한 대미 평화 협정(잠정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북한 자체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 정치·사상 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 등 3대 진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잠정 협정(나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경 군부 세력과 일부 개방 반대 세력을 설득한 후 ‘모기장식’ 제한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의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통한 서방 자본의 유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통해서 생존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남북 정상 회담 이전까지 지속했던 남한 당국 배제 전략과 ‘개혁 없는 제한적 개방 전략’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6년여 동안 북한은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핵동결을 약속하고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가려 했다.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만큼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속도가 나지 않았다.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구보 행군,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등으로 난관을 헤쳐나오려 했지만 내부 자원의 고갈로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역부족을 절감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2000년 6월 통미봉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남북 정상 회담에 응함으로써 김일성 주석 사망 직전에 추진했던 서방과의 대타협 노선을 다시 본격화했던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통하니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자임했으며, 미국·일본의 대북 접근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북한은 남북 정상 회담을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켰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과 현안 문제의 일괄 타결을 모색하게 됐다.

북한의 서방과의 대타협 전략은 먼저 서울과 화해하여 식량 지원과 경협을 활성화하고, 워싱턴으로부터는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도쿄로 가서 식민 지배에 대한 대량의 배상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경제 재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북한 경제가 재건되면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고 물질적 토대의 변화에 따른 체제 개혁도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2000년 4월 22일.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2000년 7월 4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1999년 6월 16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1998년 9월 17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1999년 6월 1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탁국제(홍콩)유한공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1995).

<2차 자료>

고유환, “김정일체제의 위기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로”, 『안보연구』, 제24호(1994).

_____,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_____,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1996)

길영환, “북한핵 개발의 정치적 측면”, 『김일성 사후의 북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집, 1994. 11. 4~5).

- 平岩俊司, “金正日 체제하의北韓政治 : ‘人德政治’와 體制守護”(아주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南北關係의 새로운 認識’의 발표 논문, 1994).
- Arrighi, Giovanni,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1989, The Continuation of 1968”, *Review*, Vol. XV, No. 2(1992)
- Aspaturian, Vernon V.,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USSR and Eastern Europe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s in China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1994).
- Wallerstein, Immanuel, *The Capitalist World-Economy*(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Wiarda, Howard J.,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pared for International Workshop, “The Durability and Direction of the Four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 China, Vietnam, Cuba and North Korea”(한국국제정치학회 · 민족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1994. 5. 27 ~ 28).

(Abstract)

Strategy for Regime Survival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Koh Yu Hwan(Dongguk University,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diagnosing the problems and failures of socialism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Kim Jong Il, who emerged as the top lead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Kim Il Sung, on July 8, 1994, has the difficult task of consolidating his leadership while resolving many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this, his top priority is to overcome the crisis of legitimacy and identity of socialist ideology, in the wake of such events as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the collapse of the East European socialist bloc and the abandonment of Marxism-Leninism by many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Kim Jong Il must do his best to convince his people of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socialism in North Korea.

Althoug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Kim Jong Il following Kim Il Sung's policies since the Kim Jong Il regime is both a part and a product of the Kim Il Sung regime. Kim Jong Il is placed in a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Kim Il Sung. Externally, Kim Jong Il has to cope positively with the new world order, and internally, he has to consolidate his succession regime and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In particular, his biggest task will be to tide over the crisis of his regime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th Kim Jong Il at its apex, has to overcome the essence of the crisis confronting socialist countries. He must also dea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olution in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 and explore a new path for socialism, invoking the experiences of China's reforms.

Key words : North Korea, Kim Jong Il, Socialism, Crisis, Survival